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3/ 3 통권 150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직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삼성폰, 현기차의 실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경영관리임직원 **개**경영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 2020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 방향
-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받아 보존장치에 보존해도 정규증빙으로 인정 됨 (p.1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문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국내 거주자와 한국 비거주자간의 납세방법과 세금혜택 적용의 차이점 >

개념구분		거주자	비거주자(수증자)
기본개념		내국인 + 국내기업 해외파견자 + 국내 183일 이상 거주 외국인	외국인 + 국내 183일 미만 거주 내 · 외국인
과세범위		전세계 소득합산, 타국 소재 재산도 적용	국내원천소득, 국내소재 재산만 적용
각종 소득세 계산		전세계 모든 소득 (특별공제 등도 모두 적용)	국내 원천소득 (본인공제만 적용)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2년 보유 중 2년 거주시: 비과세 (1주택 장기보유공제 적용)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혜택 모두 적용안됨
	일반장기보유공제	적용됨	적용됨
	양도소득세율 등	일반세율	좌동(차이없음)
증여	증여공제 직계존비속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10년 단위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직계존비속 공제와 배우자 증여공제안됨
	증여재산 합산	수증 거주자: 전체 재산 합산	수증 비거주자이면 국내재산만 과세
상속 문제		전세계 재산과세 모든 상속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상속재산만 과세 •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적 용 안됨)
종합부동산 공제		납세자별 6억원 공제	6억원 공제 적용함

(안사회계번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08 호 / 주간 9호

2021. 3. 3.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문
- ⑩ 세무·회계 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국내 거주자와 한국 비거주자간의 납세방법과 세금혜택 적용의 차이점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성실신고 확인 대상범위와 절차, 불이익 관련 규정	2
C E O 에 세 이	삼성폰, 현기차의 실수	4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설비부분매각 - 임대 만료후 세금계산서 발급 - 면 · 과세 결함상품의 면 · 과세 기준 - 임직원에게 식대 지급 회계처리 문의	6 7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8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법인세 법인별 절세 Tip	10 11
직 장 인 Survival	월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11가지 비밀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 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 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인-2823, 2020.08.25) -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 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 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서면법인-1009, 2020.05.26)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정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면해준다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받아 보존장치에 보존해도 정규증 빙으로 인정 안됨	14
세 무 정 보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16
회 계 정 보	- 2020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 -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2 34 40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5

대규모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범위와 절차, 불이익 관련 규정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성실신고확인대상 : 개인대사업자(일정매출규모(농업 등 15억원, 제조서비스업 7.5억원, 부동산업 등 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주업이면서 과점주주 법인 등

• 법인요건

- ① 지배주주 등 50% 초과
- ② 부동산임대수입 + 이자 + 배당이 총매출의 70% 이상
- ③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등 ①②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임)

2. 성실신고확인은 회계감사에 준하는 인증(assurance) 업무이므로, 회계법인 · 회계사 · 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기장 · 성실신고서작성 · 보조하되 성실신고확인권 한자는 될 수 없음(불법)

3. 실제 수행현실

회계사무소의 각 사무직원이 철저기장하고 + 성실신고확인서 내용기재완결 후 → 담당 회계사 등에게 작성자료제출 → 담당 회계사가 검토, 보완지시, 수정, 삭제 등 성실내용이 완전히 파악되어야 확인(성실확인 안되면 회계사 · 세무사 명의의 성실신고 거절됨) : 성실하지 않은 회사에 성실신고확인 서명하면 회계사 · 세무사 자격 취소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엄격함.

4. 성실확인보수 청구관계

- ① 각 고객은 성실신고지급수수료의 60% 세액공제 받음(한도 :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 따라서 기존의 세무조정수수료 이외에 성실신고만을 위한 업무보수로 개인은 200만

원 내외(=120만원÷60%), 법인은 250만원(=150만원÷60%)을 추가수수료로 책정하는 관행 : 각 납세자는 수수료의 60%를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지급액의 일부 40%만 부담하는 결과가 됨.

- ② 매출누락, 부실경비·가사경비, 비적격증빙 등으로 수입·원가·판관비 등이 불성실하면, 어느 회계사 세무사도 자기 명의로 성실신고 확인을 해주지 않음.

5. 성실신고확인 기간과 불이행시 불이익

① 법인

- 3월말일반신고 → 1개월 추가해 4월말 성실신고, 불이행시 법인세산출액×5% 가산세 + 세무조사

② 개인

- 5월말일반신고 → 1개월 추가해 6월말성실신고, 불이행시 사업소득세액×5% 가산세 + 세무조사

6. 관련 법인세·소득세법 규정(참고할 것)

- 법인세법 제60조의2①·②항, 법인세법 제7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①·②항 등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81조의2(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②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①·②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6①항 등

삼성폰, 현기차의 실수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중국은 세계최대시장이다. 세계의 모든 기업이 중국을 향해 돌진하는 이유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도, 현대차그룹 현대차와 기아차(현기차)도 그랬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는 2012~2013년 한때 중국시장 점유율 20% 돌파하며 1위를 달렸다. 하지만 요즘은 0~1%대로 헤맨다. 망신스럽기 그지없다. 현기차도 마찬가지다. 왜들 그럴까?

스마트폰의 금년 3분기 중국시장 점유율 랭킹을 보면 1위 화웨이 36.3%, 2위 비보 17.5%, 3위 오포 16.0%, 4위 샤오미 14.8%, 5위 애플 10.2%, 삼성폰은 1.2%다. 중국 4개 업체의 합이 84.6%에 달한다. 이판에서도 비싼 값의 애플은 두자리 숫자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넉넉한 이익을 누린다.

삼성폰의 첫 번째 충격은 2014년 3분기에 있었다. '대륙의 실수', 창업 4년 밖에 안되는 '줍쌀' 샤오미에게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과 나이도 1살 차이인 동년배가 금수저와 흙수저로 비교되면서 떠들썩했다. 레이쥔 CEO는 샤오미의 '가성비'와 '인터넷 유통'이라는 혁신적인 놀라운 솜씨로 샤오미를 돌풍처럼 떠오르게 한 것이다.

삼성폰이 중국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삼성이 중국인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발표됐다. 중국의 디지털 평가전문채널 '러메리얼'은 2016년 삼성노트7 폭발사고때 삼성SDI 배터리 사용을 인정했으면서도 '중국판 노트7은 안전하다'는 성명을 발표해 중국인들의 반감을 샀으며 이로 인한 논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과 인도시장에서도 샤오미, 오포, 비보는 위협적이다. 만약 미국이 화웨이를 쥐어박지 않으면 요즘 삼성폰의 글로벌 1위도 없었을 것이다.

2012년 중국시장에서 현대차그룹 현기차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6.5% 기아차 3.5% 합 10.0%를 돌파, 폴크스바겐 18.4%, GM10.4%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던 것이 2020

년 1월~9월까지의 점유율은 현대차 2.1%, 기아차 1.1% 합 3.3%로 추락했다.

1위 이치폴크스바겐(VW), 2위 상해 VW, 3위 상해GM, 4위 등펑닛산, 5위 지리기차, 6위 장안기차, 7위 등펑혼다, 8위 이치토요타, 9위 광치혼다, 10위 북경현대, 11위 동풍열달기아 순이다.

현대차그룹의 부진한 실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부동산투자가 꼽힌다. 중국에서 잘 나가던 현대차그룹은 2014년 서울 삼성동 한전 땅을 10조5500억원에 인수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짓기로 했다. 이 금액이라면 중국 지리차가 인수한 볼보같은 선진자동차회사를 인수하고도 남는다. 같은 해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함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네바다주에 50억달러 이상의 기가팩토리배터리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2017년 일부를 완공해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셀의 대량생산에 나섰다. 구글은 같은 해 알파고를 만든 인공지능 개발회사 딥마인드를 4억달러에 인수했다. 자동차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자율주행차의 핵심 요소는 인공지능(AI)이다.

현대차그룹이 땅 구입후 6년째 착공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낼 때 경쟁기업들은 기술투자과 M&A에 아낌없이 투입했다. 현대차그룹이 10조원을 땅이 아닌 기술투자에 투입했다면 중국시장에서의 몰락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9일 (금)	2월 22일 (월)	2월 23일 (화)	2월 24일 (수)	2월 25일 (목)
미	달	러 (USD)	1105.70	1107.10	1106.50	1110.80	1110.20
일	본	엔 (JPY)	1046.22	1049.04	1053.81	1055.44	1048.30
캐	나	다 달 러 (CAD)	872.48	878.23	877.55	882.15	887.02
홍	콩	달 러 (HKD)	142.62	142.79	142.71	143.26	143.16
위	안	화 (CNH)	171.71	171.50	171.40	171.90	171.84
유	로	화 (EUR)	1337.29	1342.25	1345.89	1349.68	1350.78
호	주	달 러 (AUD)	859.29	872.01	875.85	878.31	883.94
싱	가	폴 달 러 (SGD)	833.55	836.27	837.40	841.67	841.6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3.55	274.00	273.72	274.71	274.63

설비부분매각

Q 사내 설비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출계산서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를 3회분할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1개의 유형자산을 3회걸쳐 매각대금 처리시, 회계처리시 잔금시점에 일시 대체가 아닌 매출계산서 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1. 계약금

보통예금 XX / 기계장치 XX

부가세예수금 XX

2. 중도금

보통예금 XX / 기계장치 XX

부가세예수금 XX

A 설비자산은 잔금지급시점이나 등기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잔금시점에 일시 대체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임대 만료후 세금계산서 발급

Q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임대를 만료한 업체가 있습니다. 구청쪽과 원상복구 취득등록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이유로 한달치 임대료에 준하는 금액을 받기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발급해야하는지요?

임대 만료로 부가세 신고도 다 끝났고, 임대료는 아닌 상황이라서요.

A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에는 어떤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금액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성격의 금액을 주고받기로 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영업외이익(잡수익)으로 반영하고 입금증 주고받으면 됩니다.

면·과세 결합상품의 면·과세 기준

- Q** 1. 서비스업에 전자출판물을 주판매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출판물(주제품)과 다른 과세 상품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중인데, 제품의 면·과세 여부가 주 판매상품의 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매가 비중이 동일할 경우 면·과세 여부?
2. 당사는 위와 같은 경우 면·과세 비중의 역전문제를 염려하여 과세 상품이 면세제품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개별 월판매 단가는 동일금액이지만 과세의 판매개월수를 줄여 결합 상품으로 하려합니다.
이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 A** 1.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수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되는데, 귀사가 주된 재화나 용역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과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것이 좋으며, 상품구성이 비중이 동일할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 면세적용여부는 1에서도 회신했듯이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는 형태로 상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식대 지급 회계처리 문의

- Q** 1. 회사가 현금 10만원 식대를 직원에게 지급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복리후생비(비급여) Or 비과세 급여 중 항목으로 처리하나요?
2. 회사가 현금 20만원 식대를 직원에게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과 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 A** 1. 직원에게 식대 10만원 지급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2. 10만원은 비과세 급여로, 나머지 10만원 급여(근로소득)으로 가산 반영하여야 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세법상 소득처분은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처분하게 되는데, 사내유보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사외유출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과세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러한 소득처분에 있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있다.

대표자의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는 그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하면 향후 대표자가 그 소득을 법인에 환원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바, 경감되거나 배제되지는 않는다(대법 85다사 1548, 88.11. 8).

물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최종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다고 보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소득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음으로써 그 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표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자가 아니란 객관적 증빙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즉,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법기통 67-106...19).

그러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하더라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등기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 88누 3802, 89. 4. 11).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시는 각각 구분 귀속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 의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기통67-106...17).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구분	주요 내용
전자신고(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접근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간 : 매일 06:00~24:00
우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기한 : '20.6.1.(월) 18:00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다주택자 세율

구분		현행		2021년 6월 이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주택	1년 미만	40%	조정지역 : 50% 그외 : 기본세율 (6%~45%)	70%	70%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조정대상지역 3주택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법인세 법인별 절세 Tip

안내사항	안내내용
상가임대료 인하한 법인의 세액공제 안내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1.1.~'21.6.30.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에서 공제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30%(소기업 60%)가 감면됨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2015년부터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1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율 상향(7%→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공제 허용	2018.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중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법인세 업종별 절세 Tip

안내사항	안내내용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법인	2017.1.1. 이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금액의 일정률(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이 법인세에서 공제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인정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서 100%, 이후 그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50% 법인세가 감면됨
가죽 및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	주업종이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인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가 단축(기존내용연수 10년 →4년)



물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11가지 비밀

1. 일찍 일어나야 한다. 하루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더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흥미를 느껴야 한다. 본인이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책 읽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적은 시간이라도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폭넓은 사고와 이해력을 갖추게 되고, 상황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대응력을 가지게 됩니다.
4. 인사가성이 밝아야 한다. 어디서나 인사성 밝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이 각인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예절이다.
5. 겸손해야 한다. 여전히 겸손은 미덕이다. 겸손은 나아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해주는 마음가짐이다.
6.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세상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이 있다.
7.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기막힌 발상과 세상을 바꿀만한 아이디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도 생기지 않는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목욕을 하다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순간에 발상을 캐치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중 하나이다.
8. 칭찬은 구계적으로 한다.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보다 제3자에게 칭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칭찬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자랑하고 싶은 욕구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9. 좋은 인상을 유지한다. 첫인상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쉽게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0. 다름을 인정한다. 다름을 인정하면 공감에 쉬워진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다른 것=나쁜 것'이라는 공식을 삭제해야 한다.
11. 작은 빈틈을 보여줘 마음을 연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 사람들은 결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위선적이고 인간미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스펀지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 물을 빨아들이듯이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려면 그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최 신 판 례 예 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인-2823, 2020.08.25

■ 질 의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 지급한 인건비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5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월별 또는 연간)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인-3916, 2020.06.12

■ 질 의

- 전기('17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이 이월된 경우 당해연도('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구 법법§ 56②(2)에 따른 투자제외방식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구 법법§ 56②(2)에 따른 투자제외방식도 적용 가능
- (을설) 구 법법§ 56②(1)에 따른 투자포함방식만 적용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받아 보존장치에 보존해도 정규증빙으로 인정 안됨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서면법인-1009, 2020.05.26

■ 질 의

- 스캔 후 파일로 전산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명서류의 실물(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보보존장치는 어떤 장치를 의미하는지

■ 회 신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징세46101-1076, 1995.05.0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3995-132 광FILE 및 IBM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중 제2항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법령부가-44, 2020.05.26

■ 질 의

-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 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정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12월 관세법 개정이 되면서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년부터 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많은 제도가 시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19일 공개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

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 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지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은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타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장, 고가 부동산 상시검증… 변칙 증여 집중대응

국세청이 '노력 없는 부'에 대한 세무검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액·상습 체납과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상시 자금출처 검증 대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을 꼽았다.

편법적 상속과 증여로 노력 없는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과정에서 회사돈을 빼돌리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경 너머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자녀 회사 등에 대해 부당지원하는 것을 감시하고, 불법대부업체, 노년층을 노린 건강보조식품 및 의료보조기기 등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 기획재정부, 2021. 2

□ '21.2.19.(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1.1.5.(화) 정부 발표안 대비 수정된 부분은 별도 표기(밑줄)

< 조세특례제한법 >

- ①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②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1.6.30.에서 '21.12.31.까지 6개월 연장
- ③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년은 사후관리(공제 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 (현행) '19년 고용증가 시 2년간('20~'21년) 고용 유지 필요
(개정) '19년 고용증가 시 '20년을 제외하고 '21~'22년까지 고용 유지 필요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정부 발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고용이 감소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기재위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1년에 '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④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과약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②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매년 → 매 분기) 여부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2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 행	개 정 안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td>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td>30%</td></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th>한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 원 이하</td><td>300만 원</td></tr> <tr> <td>7천만 원~1.2억 원</td><td>250만 원</td></tr> <tr> <td>1.2억 원 초과</td><td>200만 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적용기한) '22.12.31.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p>□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① ~ ④ 금액의 합계액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좌 동)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96의3)

현 행	개 정 안
<p>□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p>□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기한) '21. 6. 30.

○ (적용기한) '21. 12. 3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현 행					개 정 안	
<div>□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div> <div>○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 세액공제 (단위: 만 원)</div>					<div>□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 1년 유예</div> <div>○ (좌 동)</div>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div>○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div> <div>○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div> <div>- ❶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❷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div> <div><u><신 설></u></div>					<div>○ (좌 동)</div> <div>○ (좌 동)</div> <div>-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div>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내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u>분기</u>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u>분기</u>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u>반기</u>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u>반기</u>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	0.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신 설 〉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	
		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2020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1. 2

I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20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 ① **코로나19** 장기화가 결산 및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 ②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④ '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세요.
- ⑤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 ⑥ 과거 회계오류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하세요.
- ⑦ 금감원이 게시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I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 대응

◆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참고

[참고]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주요 내용

- ✓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 수행
- ✓ 감사인의 국외 방문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을 재고자산 실사 입회, 종속기업 감사 등에 활용하는 등 대체적 절차 수행
- ✓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측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

유의사항

- ▶ (회사) 결산 관련 애로사항 존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말감사 이전에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
- ▶ (감사인)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20.12월)를 참고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 시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21.1월초 보도 예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

- 특히, '2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

[참고] 현장의 목소리

- ✓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 ✓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여,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예정('21.1월초)

유의사항

- ▶ (공통)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시,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당국이 공표할 감독지침을 참고할 필요

2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 *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 등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해야 함
 - * (상장법인)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공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일반회사</th><th>회생절차 진행회사</th></tr><tr><td colspan="2">별도(개별)재무제표</td><td>정기주총일 6주전*</td><td>사업연도 종료 후 45일</td></tr><tr><td rowspan="2">연결 재무제 표</td><td>K-IFRS 적용</td><td>정기주총일 4주전*</td><td>사업연도 종료 후 60일</td></tr><tr><td>K-IFRS 미적용</td><td colspan="2">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td></tr></table>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 재무제 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 재무제 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점검 결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 (상장법인) '15년: 167사 → '16년: 49사 → '17년: 39사 → '18년: 49사

(비상장법인) '15년: 계도 → '16년: 284사 → '17년: 107사 → '18년: 75사

○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음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상 장	미제출	59	20	22	17
	지연제출	97	18	17	32
	부실기재	11	11	-	-
	위반회사 계	167	49	39	49
	총 회사 수	2,017	2,097	2,167	2,244
비 상 장	미제출	-	113	55	29
	지연제출	-	164	52	46
	부실기재	-	7	-	-
	위반회사 계	-	284	107	75
	총 회사 수	2,339	2,533	2,687	2,986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상 장	감사인 지정	2년	-	4	2	-
		1년	3	19	9	12
	경고		56	26	27	21
	주의		56	-	1	16
	조치 없음		52	-	-	-
	위반회사 계		167	49	39	49
비 상 장	감사인 지정	2년	-	-	-	1
		1년	-	31	14	3
	경고		-	46	41	24
	주의		-	70	52	47
	조치 없음		-	137	-	-
	위반회사 계		-	284	107	75

유의사항

-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함
 - ⇒ 감사보고서일까지 제출·공시하지 않는 경우 기본조치 가중 예정
 -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도 금지
- ▶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참고] 주요 위반 예시

- ✓ (기한 계산 착오) A사는 20XX년 3월 29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 전)인 20XX년 2월 14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5일(목요일)에 1일 지연 제출
- ✓ (법규 인식 미비) 금융회사인 B사는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C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 ✓ (백지·전기 재무제표 제출) D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 ✓ (최종제출 여부 미확인) E사는 제출과정에서 파일을 임시저장하였으나, 최종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출 확인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제출
- ✓ (파일 업로드 미완료) F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 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에 문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19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일정〉

자산 규모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조원 이상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5천억원~2조원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1천억원~5천억원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1천억원 미만				개별·별도 F/S		개별·별도·연결 F/S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 ② (감사의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절차) 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절차)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 ③ (해외사례) '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19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3% 수준

유의사항

- ▶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경영진의 충분한 관심과 함께 주요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
- ▶ (감사인) 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 ※ 중장기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충분하고 적격한 인력 확보 및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 투입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신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18.9.17.)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18.12.17.)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19.12.20.)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20.9.29.)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KAM)

□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토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 및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치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 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 (적용대상·시기)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시행일
자산 2조원 이상*	'18. 12. 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9. 12. 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미만*	'20. 12. 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 자산 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 (점검 결과) 40개 회계법인이 발행한 1,243개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 KAM 선정 개수 및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의 '19년 감사보고서에 KAM을 처음 기재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 ❶ 회사당 KAM이 평균 1.18개에 불과[유럽 142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은 3.8개(최대 9개)]
- ❷ 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 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145사)중 57.2%가 2년 연속 동일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 KAM 관련사항을 재무제표 공시사항(주식)에 언급하지 않거나 KAM이 없음*에도 해당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 발견됨
- *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유의사항

- ▶ (회사) 회사(지배기구)는 KAM 선정 시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
- ▶ (감사인) 감사인은 회사(지배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사의 업종·재무상태·특수상황 등 개별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KAM을 선정하고
-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AM 선정 시 고려된 회사 특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할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2020년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20.11.17.)

5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0.6월)한 '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20.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 * ❶ 재고자산, ❷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❸ 국외매출, ❹ 이연법인세
- '2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 (공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 ❶ (재고자산)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 ❷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무형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됨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에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회수가 능가액을 측정
- ❸ (국외매출)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보다 높아 거래 상대방 및 실재성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토록 매출액(총액 또는 순액)을 인식
- ❹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활용 등을 위한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인식

※ 참고 보도자료

-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20.6.22.)

6 회계오류 예방노력 경주 및 과거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 회사는 주요 거래 및 신규 취급 거래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 (회계오류 예방 · 수정절차)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 · 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 · 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 (자진정정 감경제도)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 오류수정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 실시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 (회계오류 심사·감리 실적) '15년부터 '20.9월까지 회계오류 자진수정내역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이중 '과실' 위반비중이 62.8%)

유의사항

- (회사)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과거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 내용을 충분히 공시할 필요
- (감사인) 회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지 않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회사 감사조직에 통보해야 함
- (공통) 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 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 * 전기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조율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동 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① 논의된 의견불합치 사실, ② 주요 협의내용, ③ 관련 계정과목 및 조정금액 등을 기재 ('21.1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예정)

※ 참고 보도자료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19.12.25.)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
-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 ('20.12.20.)

7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 발생 예방

◆ 회계인프라 취약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틀리기 쉬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재무제표 심사·감리 수행 결과,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가 많았음
 - 경조치(주의, 경고) 종결된 회계오류이므로 비록 외부에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제공시함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고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적 사례*를 추출하여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 * ①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심사·감리 결과 경조치 사례 31건,
 ② 회사들이 반복 위반하는 주식 공시의무사항 관련 사례 11건

유의사항

- ▶ (공통)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를 참고하여 범하기 쉬운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III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

- 금융감독원, 2021. 2

- ◆ (개요)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의 매년 재무제표 자진수정 현황을 점검하고 중요 회계오류 수정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간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안내
- ◆ (심사·감리 실적)
 - (조치회사수) '15년부터 '20년 9월까지 총 78사에 대하여 조치
 - ※ 연도별 조치내역
('15년) 1사 → ('16년) 10사 → ('17년) 4사 → ('18년) 16사 → ('19년) 27사 → ('20.9월 말) 20사
 - (수정내역) 78사는 회계오류를 감사보고서 재발행(38사, 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40사, 51.3%)의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이 중 62사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오류를 수정
 - (위반동기) 과실 위반 비중이 62.8%(49사)인 바, 이는 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소요기간) '20년 현재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 평균 9.5개월이 소요되어 전년도('18 : 12.1개월, '19 : 10.1개월)에 비하여 감소 추세
 - 이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에 따라 과실위반 회사에 대하여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한 영향(총 17사, 평균 3.3개월)
- ◆ (감독방향)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수정실태 점검 후 신속하게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
 - 아울러 다년간 누적된 오류를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

I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4년부터 매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
- * 회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 그 수정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실시 가능
 - 그 간의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오류 수정기업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

II 심사·감리 실적

1 조치 회사수

- 회계오류 자진수정 기업을 점검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한 후, '15년에 최초로 자진오류수정 관련 위반에 대하여 조치하고, '20.9월까지 5년간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
- 심사대상 선정범위를 정교화*하여 선정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고,
 - * ('17년) 점검대상 확대 (상장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
 - ('18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 시 감사보고서 상 오류수정 여부 점검
 - 新외감법 도입·시행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 및 회계감사에 신중을 기한 결과, 과거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18년 이후 증가

〈연도별 조치회사수〉

(단위: 사)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9월 기준)
회사수	1	10	4	16	27	20

2 회계오류 수정내역

- (수정방식) 상기 78사는 감사보고서 재발행(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51.3%)의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
- 오류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16배 이상의 오류를 수정한 회사 중 66.7%가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
 - * 재무제표 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는 기준금액

〈회계오류 수정방식〉

(단위: 사, %)

중요성금액 대비 오류금액 규모	감사보고서 재발행	비교표시 전기F/S 수정 등 *	계
16배 이상	12 (66.7)	6 (33.3)	18
16배 미만	26 (43.3)	34 (56.7)	60
계	38 (48.7)	40 (51.3)	78

*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상 방법 포함

- (수정내용) 수정회사 중 62사*(79.4%)가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A유형)를 수정

* 오류를 다수 수정한 회사의 경우, 이중 A유형 오류가 1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회계오류 수정내용〉

(단위: 사)

회계오류 종류	회사수
자기자본·손익 관련 오류 (A유형)	62
수익·비용, 유동·비유동 분류, 영업현금흐름 관련 오류 등 (B유형)	7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관련 주식 누락 (C유형)	7
기타 계정분류, 주식 관련 오류 등 (D유형)	2
계	78

3 조치내역

- (개황) 자진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78사 중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19사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 이후에 19사에 대하여 심사에 착수하여, 17사는 경조치 종결(금감원장 전결), 2사는 증선위 조치(고의·중과실 위반)

〈연도별 조치회사수〉

(단위: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9월말 기준)	계
전체 조치회사수	1	10	4	16	27	20	78
유가·코스닥	1	9	4	10	22	13	59
코넥스·비상장	-	1	-	6	5	7	19

심사제도 도입 후	-	-	-	-	8	11	19
증선위 조치	-	-	-	-	-	2	2
금감원장 경조치	-		-	-	8	9	17

□ (위반동기)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사(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사(29.5%)이며, 과실 위반이 49사(62.8%)

○ 新외감법 시행('18.11.1.)에 따른 조치양정기준 개정('19.4.1.) 이후 중과실 적용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과실 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

*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 시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연도별 조치회사수〉

(단위: 사, %)

	'15~ '17년	'18년	'19년	'20년 (9월말)	계
조치회사	15	16	27	20	78
고 의	1	3	-	2	6 (7.7)
중과실	8	5	8	2	23 (29.5)
과 실	6	8	19	16	49 (62.8)
과실 비중 (%)	40	50	70.4	80	62.8

4 조치 소요기간

□ (전체) 78사의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

○ 조치대기기간* (2.9개월)을 제외한 평균 감리기간(심사 포함)은 6.8개월

* 금감원에서 증선위 안건의 상정을 요청한 후부터 최종조치까지의 기간

□ (연도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 후에 과실*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단축

○ 연도별 평균 소요기간은 '18년 12.1개월, '19년 10.1개월 및 '20년 9.5개월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조치양정기준 개정에 따른 과실 비중 증가의 영향도 있음



〈평균 조치소요기간〉

(단위: 개월, 사)

기 간	전체	연도별			
		'17년	'18년	'19년	'20년 (9월말)
감리(심사)	6.8	5.3	8.3	6.6	7.1
조치대기	2.9	2.0	3.8	3.5	2.4
평균 소요기간 (회사수)	(78)	(4)	(16)	(27)	(20)

- (감리 조치) 감리 착수* 후 증선위 조치(61사)까지 평균 11.5개월 소요, 이 중 감리기간은 7.8개월, 조치대기기간은 3.7개월

* 감리 착수 前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착수일 기준

- 재무제표 심사 조치(17사)의 경우 평균 3.3개월 소요

(단위: 월, 사)

기간	감리	심사	전체
감리(심사)	7.8	3.3	6.8
조치대기	3.7	-	2.9
평균 소요기간 (회사수)	11.5 (61)	3.3 (17)	9.7 (78)

III

향후 감독방향 및 유의사항

1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신속한 심사 실시

- 향후에도 주기적(연간 1~2회)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 실시 예정
-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

- ➡ 회사는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감사인은 재감사 및 감사보고서 수정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

2 일시 비용처리 등 심사회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과거 다년간 누적된 회계오류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하는 등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장기간 지속된 회계오류의 경우 정보이용자들이 오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기간별로 오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수정내용을 충분하게 공시할 필요

* 회계오류 수정·공시가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회계오류 자진수정에 따른 조치기준 감경 적용 곤란

3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시여부 검토

- 감사인이 변경된 후에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수정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 지침」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은 ①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각자의 검토내용 및 결론, ② 전기재무제표 수정방식 등에 대하여 3일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 당기감사인은 전기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 회계처리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수정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4 주기적 회계심사·감리 실적 공개

- 상장회사, 감사인 및 정보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오류 자진수정 관련 심사·감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 예정

* <예시> 3년에 1회 이상 심사·감리실적 공개

- 주요 재무제표 수정사례, 조치실적 등을 공개하여 상장회사 등이 유사한 회계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 등의 재무정보 이용에 있어 보다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1. 2

【심사·감리 결과】

- ① (실적) 금융감독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 (표본 79사, 협의 44사)
 -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 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139사) 대비 11.5% 감소
 - *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
- ②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63.4% (78사 조치) 로 전년 (59.0%) 대비 4.4%p 증가 (표본 심사·감리 44.3%, 협의 심사·감리 97.7%)
- ③ (위반유형)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 관련 위반비중 : '18년 75.0% → '19년 75.6% → '20년 80.8%
- ④ (위반동기) '고의' 위반 회사(14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8.5%) 대비 9.4%p 증가
- ⑤ (과징금)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과징금부과 총액(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 (90%↑)
- ⑥ (회계법인 및 회계사) 회계법인 37사 및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 시행으로 회계법인 등 조치건수 대폭 감소 (회계법인 57.5% ↓, 회계사 46.3% ↓)]

【시사점】

- 회계분석과 관련하여 ❶ 회사 및 감사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❷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등으로 적발 가능성도 증가
-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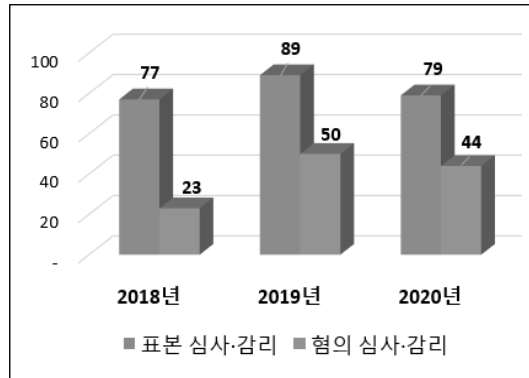
I 분석대상

- 금감원이 '20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사*
-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3사,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80사
-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 여건이 악화되어 동 실적은 전년 대비 11.5% 감소 ('19년 139사 → '20년 123사)
- *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심사 절차로 종결 (전년 31사 대비 51사 증가, 164.5% ↑)
-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7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44사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단위 : 사, %)

구 분	'18년	'19년	'20년	'19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77	89	79	△10	△11.2
혐의 심사·감리	23	50	44	△ 6	△12.0
합 계	100	139	123	△16	△11.5



심사·감리 관련 용어 (新 외감법 기준)

- ① **심사** :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사항(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② **감리** :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재무제표 심사결과 위반사항이 중과실 또는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나, 회계부정정보 접수 등에 따른 감리)



II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분석

1 회 사

< 지적률 >

-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23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사*로 지적률은 63.4%이며 전년 대비(59.0%) 4.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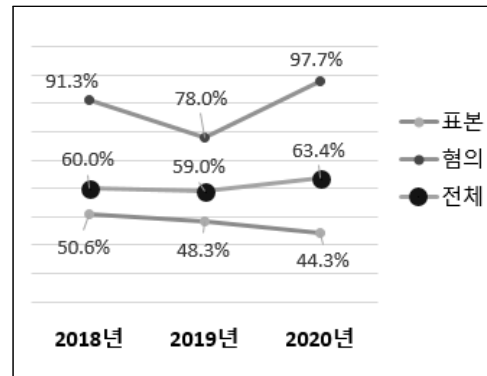
* 유가증권시장 소속 26사(지적률 60.5%), 코스닥·코넥스 소속 52사(지적률 65.0%)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 대비 4.0%p 감소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p 증가

<심사·감리 결과 감리종류별 지적률>

(단위: 사, %, %p)

구 분		'18년	'19년	'20년	'19년 대비
표본	회사수(위반)	39	43	35	△ 8
	지적률	50.6	48.3	44.3	△4.0
혐의	회사수(위반)	21	39	43	4
	지적률	91.3	78.0	97.7	19.7
합계	회사수(위반)	60	82	78	△ 4
	지적률	60.0	59.0	63.4	4.4



- ① (표본)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3년 평균 59.8%)이 테마(3년 평균 41.3%) 및 무작위(3년 평균 37.5%) 보다 높은 수준
- 위험요소를 고려한 심사·감리 지적율은 '20년에 특히 높은 수준인 바('18년 69.2% → '19년 45.2% → '20년 72.4%),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효과적인 위험요소 등을 지속 발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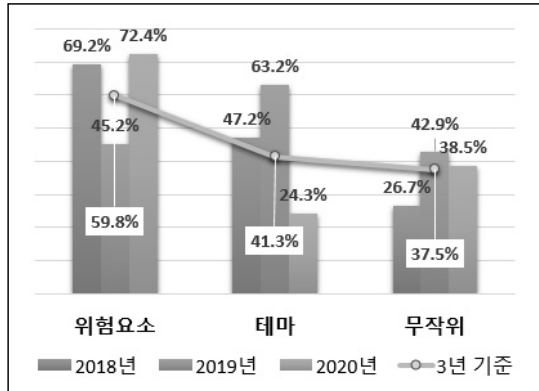
※ 심사대상 표본 선정방법

- ①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 ② 테 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 ③ 무작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표본 선정방법별 심사·감리결과 위반현황〉

(단위 : 사, %)

표본 선정방법		'18년	'19년	'20년	3년 기준
위험 요소	회사수(위반)	18	19	21	58
	지적률	69.2	45.2	72.4	59.8
테마	회사수(위반)	17	12	9	38
	지적률	47.2	63.2	24.3	41.3
무작위	회사수(위반)	4	12	5	21
	지적률	26.7	42.9	38.5	37.5



- ② (협의) '19년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관련한 조치양정기준 완화 등으로 무혐의로 중
결한 회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선정기업 대부분을 조치하여 지적률 증가

< 위반유형 >

-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증가

* 당기손익·자기자본 관련 위반(A유형) 비중: '18년 75.0% → '19년 75.6% → '20년 80.8%

** '20년 중 78사에 대하여 총 156건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지적(1사당 평균 2건)하였으며, 이 중
당기손익·자기자본의 변동과 관련한 위반이 있는 회사 기준

※ 지적회사별 위반건수 분포 ('20년)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계
회사수	38사	22사	8사	6사	4사	78사

-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계
속 증가

* 매출·매출원가 과대, 유동·비유동 분류오류 : '18년 4사 → '19년 14사 → '20년 15사

〈지적사항의 위반유형별 현황〉

(단위 : 사, %)

위반유형		'18년	'19년	'20년	3년기준
A 유형	회사수(위반)	45	62	63	170
	비 중	75.0	75.6	80.8	77.3
기타 유형	회사수(위반)	15	20	15	50
	비 중	25.0	24.4	19.2	22.7

※ A유형이 포함된 복수의 지적 회사는 A유형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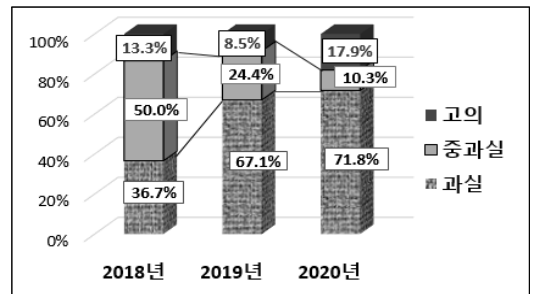
**< 위반동기 >**

- '20년도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 적발 비중은 17.9%인바, 회계부정제보 증가 등으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
 -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4배 기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증가 ('19년 67.1% → '20년 71.8%)
 - *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하면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상장회사의 위반동기 분석〉

(단위 : 사, %)

위반동기		'18년	'19년	'20년	3년 기준
고의	회사수(위반)	8	7	14	29
	비 중	13.3	8.5	17.9	13.2
중과실	회사수(위반)	30	20	8	58
	지적률	50.0	24.4	10.3	26.4
과실	회사수(위반)	22	55	56	133
	지적률	36.7	67.1	71.8	60.4

**< 과징금 >**

-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감소('19년 23사 → '20년 17사)하였음에도, 고의 위반사례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부과총액('20년 94.6억원)은 전년(49.8억원) 대비 크게 증가 (90%↑)

*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하여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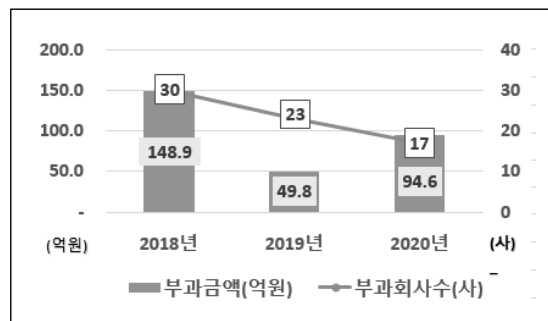
〈상장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사, 억원)

과징금 부과	'18년	'19년	'20년
대상회사	30	23	17
부과금액	148.9 ^{주1)}	49.8	94.6 ^{주2)}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	5.0	2.2	5.6

주1) '18년에는 삼바(80억원) 등에 대해 부과

주2) 이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21.9억원



※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은 13사로 전년(10사) 대비 증가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0년 중 32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감사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 전년(87건) 대비 크게 감소(57.5%↓)
 - 재무제표 심사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되어 경조치한 40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
 - － 한편,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6개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미부과
 - '20년의 조치(총 37건) 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수준,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
 - * (4대회계법인 비중) '18년 25.6% → '19년 25.3% → '20년 35.1%
- (공인회계사) '20년 중 조치한 공인회계사는 총 95명으로 회계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전년(177명) 대비 조치건수가 감소(46.3%↓)

〈상장법인 감리 관련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현황〉

(단위 : 사, 명, %)

구 분	'18년	'19년	'20년	'19년대비	
				증감	증감률
회계법인	78	87	37	△ 50	△ 57.5
공인회계사	199	177	95	△ 82	△ 46.3
법인당 평균	2.55	2.03	2.57	0.54	26.6

※ 회계법인은 조치건수, 공인회계사는 조치자수 (중복 건은 각각 합산)

III 시사점

1. 외감법 상 과징금부과 등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사례 증가

- 新 외감법 시행('18. 11. 1.)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18회계연도(12월 결산 기준) 위반부터 적용되어,



- '20년 중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 부과
- ※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부과금액의 8.1배에 달하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하고, 대표이사·담당임원에게 각각 회사 과징금의 1/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존재

-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회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2. 기업의 리스크를 고려한 충실한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필요

-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여 중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확인되는 경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 *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부과
- 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감사소홀 여부를 판단
- ※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다른 경우, 감사인이 동일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절차 소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 최근 동 일반원칙을 반영하여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개정('21.2.8. 시행)

➡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후 필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가 고의적인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회계부정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 노력으로, 동 제도가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
- '19년~'20년 중 고의적인 회계분식이 적발된 21개 상장회사 중 10사('19년 4사, '20년 6사)는 회계부정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 실시
- '20.3월 익명신고제도 도입 이후 신고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 중인바, 앞으로 회계부정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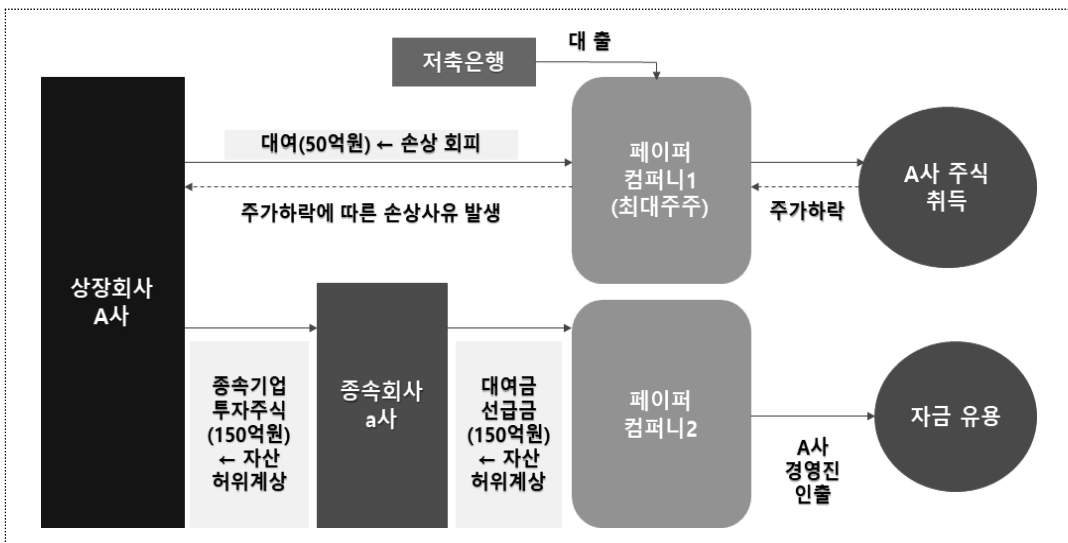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누구든지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장회사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동참할 필요

붙임 - 감리결과 지적사례

사례 1 대여금·선급금 등 허위(과대)계상

-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경영진은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 * 자기자본 없이 A사 및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A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무자본 M&A)
-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150억원)으로 허위계상하거나 회수가가능성이 없는 자산(50억원)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자본을 200억원 과대계상

[A사 등의 자금흐름도]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 회사·대표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을 검찰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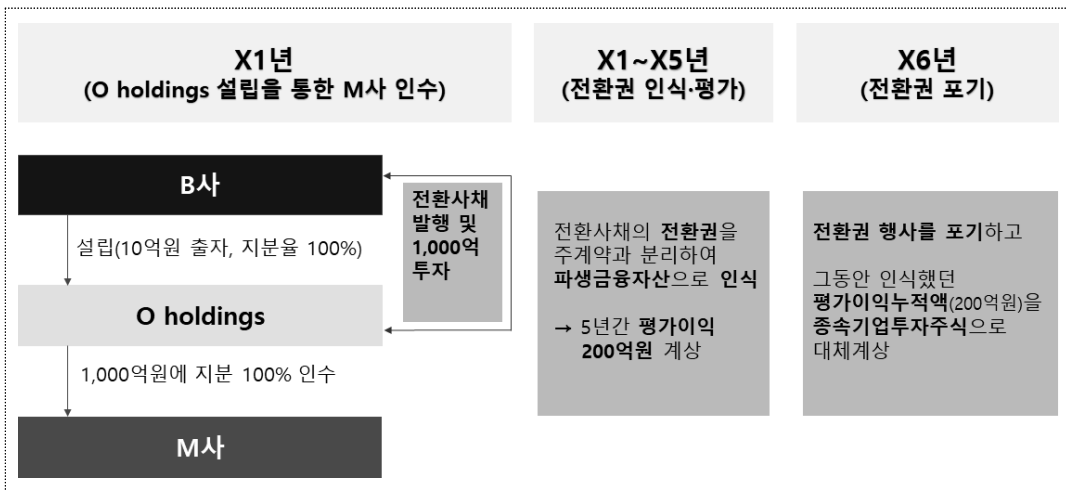
사례 2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적내용)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B사는 M사를 인수하기 위해 O holdings를 설립(지분 100% 출자, 이하 '종속회사')하고, 종속회사가 M사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1,000억원)에 투자(X1년)
 - B사는 전환권을 주계약(사채)과 분리하여 파생상품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동 전환권의 평가손익을 매년 당기손익으로 계상(X1~X5년 200억원)



- 전환사채 투자 후 6년이 되던 해에 전환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간의 평가이익누적액(200억원)을 제거해야 함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잘못 계정대체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위반

[사실관계 및 B사의 회계처리 현황]



- (조치내용) 증선위는 B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조치

사례 3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등

-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C사는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재파생상품인 신주인수권을 공정가치로 측정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 최초 입수한 신주인수권 외부평가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노력*을 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 등의 계상을 누락
 - * ① 새로운 평가보고서를 입수하거나 ②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해당 사실을 주석에 공시해야 함

-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등 조치